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2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
【의원발의】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3.

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4. 3. 12.

기획재경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이진환 의원 등 7명(이영빈, 장호섭, 김정희, 고명욱, 임미연, 남현주)
- 발의일자: 2024. 2. 28.(수)
- 회부일자: 2024. 2. 28.(수)
- 검토기간: 2024. 2. 28.(수) ~ 3. 6.(수)

2. 제안이유

- 「평생교육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,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, 여가·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 및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(안 제4조)
-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(안 제5조)
-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(안 제6조)
-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자문 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: 「평생교육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
- 비용추계서: 필요시 예산 조치
- 입법예고(2024. 2. 28. ~ 3. 8.)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제출된 본 조례안은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및 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)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및 제20조(교육)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,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고,
 - 안 제4조에서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」에 따른 평생교육 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,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안 제6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 - 안 제7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」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과 일상·사회·직업·여가·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【관 계 법 령】

□ 평생교육법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.

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)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장애인복지법

- 제20조(교육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·능력·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.
-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(修學)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